

#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 26일까지 열흘간... 올해 전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등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7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전북도 2차 추경안과 일본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10일 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성임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18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행자위,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채용 객관·공정성 확보 통한 우수 인재 선발 목적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가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강화 및 통합발기사업 실적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

자·출연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운용계획 수립,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장은 "2019년도 기준 650여 가량의 도비가 출연금으로 지

이외에도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마련 건의안' 등 총 20건(조례안 19, 예산안 1)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제366회 임시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된다. /김진성 기자

원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합발기사업 실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채용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추석 후 '민생·외교'에 전념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책 성과 창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생·외교안보' 두 가지 큰 축을 기반으로 현장 행보 및 외교 일정 등을 소화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부터 4박5일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청와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추석 이후 꺼내든 민생 챙기기는 '조국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이자 분위기 일신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국정 성과 구현이 절실히 필요한 집권 중반기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끌어올릴 예산과 입법 역시 '조국 정국'에 가로막히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만큼, 언제까지 조국 정쟁을 끌고갈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조 장관 임명에 극렬 반발하며 원내외 투쟁에 돌입한 야권에 맞서 민생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명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민생과 외교안보 두 가지를 아주 능숙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고 의견을 모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미 대화 재개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비핵화 외교전'에 대한 준비도 탄탄히 해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고 대변인은 "유엔총회에서 준비할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했다.

### 수보회의서 '일관성' 국정 운영 방향 제시 방미 전까지 최대한 민생 챙기기에 '집중' 내주부터는 외교·안보 이슈에 총력전

'일관성'이었다.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한 성과와 창출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외교안보" 두 가지 큰 축을 기반으로 현장 행보 및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민생과 외교안보 두 가지를 아주 능숙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고 의견을 모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미 대화 재개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비핵화 외교전'에 대한 준비도 탄탄히 해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고 대변인은 "유엔총회에서 준비할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했다. 비핵화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선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계급선무인 만큼,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차분히 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특히 평화경제라는 밑그림을 토대로 한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외교·안보분야에서 정책 일관성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민도 질서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 교육부, 나경원 아들 '서울대 인턴' 특혜 의혹 조사 착수

### 연구윤리보다는 국가 자산 무단사용에 초점 맞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국립대 자산인 서울대 의대 실험실 출입과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의 국립대 실험실·장비 사용 특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서울대에 내역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의원실의 요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험했다. 실험결과를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로 작성해 2015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학술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신혜는 연구윤리 한 의학 실험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학생 스스로 몸에 측정하는 데다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소속은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원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 포스터 발표 내용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거나 연구진들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연구 1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제1자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딸의 경우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지만, 나 원내대표 아들은 정식 학술 성과라 볼 수 없는 포스터 연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윤리 심의는 일차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사안인 만큼 서울대의 자

체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교육부가 주목하는 특혜의혹은 따로 있다. 만약 나 원내대표 아들이 규정·절차 없이 윤 교수의 실험실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실험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국립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되고, 교육부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공개 대학원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이용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인턴 자리를 만들어 실험실에 출입하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립대 실험실장비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자산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절차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16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예일대 입학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 지방의 남북교류 활성화·정당 역할

### 민주 안호영 의원 전북대서 특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위주·진안·무주·장수)이 16일 전북대학교에서 '지방의 남북교류와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령 개정 민관 참여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농도 전북, 농업 분야 금융중심지 육성 연결"

안 의원은 이날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 역대 정부 및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한 뒤, 전북의 남북 교류 현황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전북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 관련 법령이 지자체를 남북교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과 함께 행정·단체·민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형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식량 증산 및 공동연구, 종자 공동연구, 축산기술 지원 등의 농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일의 중요성과 이의 과정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통일교육요제 제정도 수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진성 기자

## "한빛원전 피해 보상 확대를"

### 유성엽 의원, 원전 피해 지역 지원 강화 법안 등 발의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정읍·고창)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그리고 방사선폐기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로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 정지된 데 이어 6월에는 계획정비 중이던 한빛 3호기에서 격납건물의 압력누설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철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는 공극 94곳, 2017년 11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4호기에서는 공극 96곳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소재지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 사고 위험 속에 불안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인 것. 또한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소재지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임에도 아무런 대비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어, 직·간접적 피해범위



리는 겨우 3km에 불과하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700만원, 중수로: 다발당 20만원, 그 밖에 방사선폐기물: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450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 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주민들의 재난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조현 前외교차관, 퇴임 1달 만에 주유엔대사 내정



신임 유엔대사에 지난 5월 퇴임한 조현(62) 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조 내정자는 민주노총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교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조 내정자는 외교교통상부 다자외교조서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주인도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한 다자·통상외교 전문가다. 조 내정자는 2017년 6월부터 외교2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9월에는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라는 평가다. /뉴스1

조 내정자는 다양한 외교 실무경험과 외교부 1·2차관으로 근무하며 보여준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유엔대사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가 이날 밝힌 추계 공관장 인사에 따르면 뉴욕총영사와 요코하마총영사에는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윤화찬 외교부 여권과장이 각각 내정됐다. 외교고시 15회 출신인 장 내정자는 주미대사관 2등 서기관을 시작으로 주중국대사관 참서관, 주중국공사 등을 역임한 '중국통'이다. 장 내정자는 지난 한해 동안에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이끌었다. 이날 발표된 신임 재외 공관장 3명은 아그레망(주재국의 동의 절차)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다. /뉴스1